

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[총론]

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탄생 시, 5개의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정리한다.

□ 민주당의 기본이념

○ 5대 원칙

- 관료 중심이 아닌 정치인 중심 정치
- 정책 결정을 내각에서 일원화
- 각 정부기관의 이익 아닌 국익 중심의 정책
- 수직적 이권사회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사회
-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

○ 5대 개혁 방안

- 대신, 부대신, 정무관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, 조정, 결정
- ‘관료위원회’를 중심으로 정치인 스스로 의사결정
- 관저 기능 강화, 총리 직속기관인 ‘국가전략국’이 국가 비전을 수립
- 사무차관, 국장 등의 간부인사에 업적평가에 따른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
- 국민적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재검토하는 ‘행정쇄신회의’ 설치

□ 구체적인 정책 공약 내용

1. 절약

-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지출을 모두 재검토
- 낙하산 알선 금지, 특별회계, 독립행정법인, 공익법인 재검토

- 담합, 불투명 계약 배제
- 공무원제도 개혁 실시
- 중의원 비례대표정수 80명 삭감
- 세금 용도의 명확화, 공평하고 간소한 세제 제정 등

2. 육아, 교육

- 출산장려금 55만엔 지급
- 아이 1인당 월 2만6천엔의 육아수당 지급
- 공립고 수업료 무료화, 사립고 학비 연 12~24만엔 지원
- 대학생, 전문대생을 위한 장학금제도 창설
- 생활보호지원 복구, 父子가정에 아동부양수당 지급
- 어린이집 입소대기 문제 해소 등

3. 연금, 의료

- ‘사라진 연금’ 문제 집중 해결
- 연금보험료 유용 금지
- 연금제도 일원화, 월7만엔 최저보장연금 실현
- 사회보험청과 국세청을 통합하여 ‘세입청’ 창설
- 고령자의료제도 폐지, 국민보험 유지
- 의대생 1.5배,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증원
- 신종플루, 암, 간염 대책 확충
- 급여 월 4만엔 인상, 간호인재 확보 등

4. 지역주권

- 관료체제 해체,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교 및 안보에 특화, 지방에 권한 이양
- 국가보조금 폐지, 지방의 자주재원 전환
-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분담금 폐지
- 유류세 등 잠정세율 폐지

- 고속도로의 단계적 무료화
- 우정사업 재검토 등

5. 고용, 경제

- 중소기업 감세
- 월 10만엔의 수당 지급 등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구직자 지원
- 정규직 확대, 제조 분야의 인재파견 금지
- 최저임금 시급 1,000엔으로 전국 동시 인상
- 노동조건의 직장별 균등화
-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% 삭감하기 위해 배출량거래시장 창설, 지구온난화대책세 도입 검토
- 태양광패널, 환경차, 에너지절약가전제품 구입 조성 및 신산업 육성 추진

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, ‘특집 민주당경제 총점검’ (2009.11.4)